

북중러 협력 관계 평가와 전망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I. 서론

북한은 2022년 초부터 2021년과는 확연히 다른 국방정책과 대외정책 방향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차례를 포함 총 6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사실상 포기하고,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하는 정책에 따른 행동으로 분석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러 간 대결 국면도 이전과 다른 대외정책 방향을 보여준 핵심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북한의 연쇄적인 도발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주목할 대목이 올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북중러 협력관계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통해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2022년 11월 14~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잇달아 열린 미중 및 한중정상회담에선 북한 관련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도발 자제를 위해 중국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언급하였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뉴스1』,

2022/11/18). 중국 당국은 올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비롯한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 때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우군 역할을 유감 없이 수행해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 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는 대북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였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적극 협력했던 2017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중국은 2017년 9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데 대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KBS NEWS, 2017/09/12). 당시 중국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에 관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재차 핵실험을 진행해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중국은 안보리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호소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중러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북한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경쟁 심화 국면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 신냉전 구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연대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며 공고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를 두둔하는 북한의 모습이 더욱 두드러졌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후 대미 공동선언에서 북중 협력을 강조했던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대러 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미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유엔 무대 등에서 러시

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하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이전에도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협력 구도가 있었지만, 북한이 기존의 소극적인 고립탈피 전략을 넘어 신냉전 대치 국면에서 적극적인 행위자 역할을 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2022년 한반도 정세평가 및 2023년 정세전망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북중러 협력관계의 실태와 특징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처럼 북중러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정세 변화 및 북한의 노림수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연구는 향후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북중 관계 동향

2022년 한해 북중 간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상호 관심사를 서로 공유, 지지하면서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보여주었다. 베이징 2022 동계올림픽, 북한 창건기념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등 주요 계기시마다 두 나라 정상 간 빈번한 친서(축전, 답전)를 주고 받았으며,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과시했다. 북한은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중국은 미국 책임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합리적 안보위협에 대한 고려를 강조했고, 제재 만능론을 반대하면서 미국의 대화 여건 조성 등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일관되게 촉구했다. 9월에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화물열차가 운행되었고, 북중 무역액은 매일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0월 기준 북중 교역액은 1억 5386만 달러로, 전달보다 48%, 지난해 10월보다는 268% 급증했다. 10월에는 중국에서 쌀을 1만6,450톤 가량 수입했다. 북한 선박이 중국이나 주변 해역으로 향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북중 무역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한 2020년 2월 1천71만 달러까지 떨어졌고, 이후에도 줄곧 5천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다 양국이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올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표 1〉 2022년 북중 관계 주요 일지

일자	주요 내용
1.10	미국과 영국 등이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추진했으나 중국은 러시아와 보조를 맞춰 반대
1.17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북중 접경지역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다고 확인
1.20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안을 '보류'(hold)하면서 성과 없이 종료
2.4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축전을 보내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관계를 과시
2.2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축전과 친서에 답전을 보내 사의를 표하고 두 나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조
2.2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2022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는 구두친서를 발송
2.22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만해협 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장본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대만에 1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의 분열을 촉진시켜는 속셈이라고 비판
3.21	김정은, 중국 여객기가 추락한 21일 당일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위로 전문을 발송. 중국 광둥성 광저우로 향하던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21일 오후 광시좡족 자치구 산악 지역에 추락. 이후 구조 작업이 벌어졌으나 승객과 승무원 등 132명 중 생존자가 미발견
5.16	북한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 3대가 중국 선양과 평양을 왕복운행, 항공기에 실린 것은 모두 의약품인 것으로 확인

일자	주요 내용
5.26	북한의 ICBM 시험 재개에 대해 미국이 주도해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 제기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
5.30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1일 하이난(海南) 보아오(博鳌)에서 열린 2022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전 지구적 안전발기'(글로벌 안전구상)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시
6.1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구체적 행동을 보이길 바란다. 예를 들자면, 적절한 시기에 대 조선(북한) 제재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강조
6.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은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장진(張軍) 대사를 통해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정책 뒤집기와 기존 대화의 성과를 고수하지 못하고 조선(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무시한 데서 비롯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비판
7.1	최섉희 북한 외무상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홍콩 반환 25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전송
4.28-7.28	3년 만에 컴퓨터망으로 열린 북중국제상품전람회를 한달 연장해 7월 28일 폐막. 전람회에는 북한측에서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금강산특산물교류사를 비롯한 50개의 무역단위들이, 중국측에서는 베이징침위사건강과 학기술유한공사와 단동명정상무유한공사를 비롯한 40여개 기업들이 참가해, 농업, 건재, 수산, 의학, 경공업 등 도합 645종에 950점의 상품자료들이 전시
7.28	전승 69돌 기념일을 맞이해 참전국인 중국측 전사자들을 위한 '우의탑'을 찾아 피로 맺어진 '조중친선'이 사회주의 위업의 전진과 더불어 대를 이어 계승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
9.9	시진핑, 김정은에게 '공화국 창건 74돌' 축전을 보내 두 나라의 전통적인 친선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강조
9.21	김정은, '공화국 창건' 74주년 축전을 보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답전을 보내 북중 관계 강화발전 의지를 과시
9.26-27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화물열차 운행
10.5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맞서 5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반대, 언론성명도 반대

일자	주요 내용
10.1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중국 창건 73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낸데 대한 답전을 보내 양국 협조를 강조. 시주석은 답전에서 "지금 국제 및 지역정세에서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조(북중) 쌍방사이에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 -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중국공산당 제20차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축전을 보내 두당사이의 유대와 양국 협력을 강조
10.23	김정은, 3연임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다시 선출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을 과시
1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고강도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개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는 북한측 주장을 반박.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이나 추가 제재에 관한 공개 논의 없이 종료
11.16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발의된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 주유엔 중국 대사관은 인권이라는 구실을 이용한 북한 내정에 대한 간섭 시도로 깊은 우려를 표시
11.21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무산. 중국측 대표는 "안보리는 이(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항상 규탄하고 북한을 압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11.22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김정은 당 총비서가 중국공산당 20차 대회 직후 보낸 축전(10월23일)에 대한 '답전'에서 "나는 중조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지역·세계의 평화·안정·발전·번영에 새롭고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26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

출처: 북한 『노동신문』을 비롯해 국내외 언론보도 내용 참조

III. 북·러 관계 동향

2022년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상호지지를 강화해 왔다. 북한은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도 변함없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나라들 중 하나였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러시아는 유엔총회 등에서 대북 추가제재를 반대하며,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행보를 보였다. 핵·미사일 개발이 한미에 맞선 '자위적 조치'라는 북한의 주장과 미국의 적대적 활동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거듭된 요구를 옹호했다. 북한은 부인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탄약 지원 등 군사적 협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지역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돈바스 지역 재건을 위해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8월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일부를 돈바스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며, 국내에서도 파견 인원을 차출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북러 간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8월 러시아로부터 밀을 수입한 데 이어 10월에는 휘발유와 디젤유, LPG 가스 등을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데일리엔케이』, 2022/10/21).

〈표 2〉 북러관계 주요 일지

일자	주요 내용
1.10	미국이 1월 5일 실시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북한인 5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에 의해 무산

일자	주요 내용
2.28	북한 외무성 대변인,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의 근원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있다”고 주장
3.2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전쟁은 러시아의 자위적 조치”라며 러시아 철군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유엔(UN) 총회 결의안에 반대 표를 행사
3.11	미국 재무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관여했다며, 러시아인 2명과 기업 3곳을 추가 제재
4.24	북한 외무성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회담 3주년을 맞아 러시아와의 친선 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 3년 전인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처음으로 만나 회담을 진행
4.26	북한 외무성은 26일 ‘왜 무기지원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서방이 전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 안보상황을 악화시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맹비난
5.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승절’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로씨야(러시아)에서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기념일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친선적인 로씨야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라며, 올해 77주년을 맞는 전승절을 축하
5.17	이고리 모르굴로프(아태 담당) 차관이 신흥철 주러 북한대사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맞선 투쟁에서 러시아-북한 간 협력 전망을 포함한 양자 현안들 논의
5.26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논의되었으나 중국, 러시아 반대로 부결
7.14	최설희 외무상,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 외무성 대변인은 7월 15일 이에 반발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단교조치 통보에 대해 “지난 시기 미국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동조하면서 국가간 관계에서 공정성과 정의가 심히 결여된 행위를 저지른 우크라이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주권 행사에 대하여 시비할 권리나 자격도 없다”고 일축
8.15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독립을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의 데니스 푸실린 국가수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일제로부터의 해방 77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발송

일자	주요 내용
8.17	북한과 러시아 정부사이의 ‘비행안전성 제고에 관한 협정’이 모스크바에서 체결
8.19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 국영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코로나 종식선언 전후 상황과 그 비결, 서방의 의혹제기에 대한 반박, 남측에서 살포한 전단이 코로나 유입경로라는 북측 주장 등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해당 기사는 이날 [노동신문]에도 전문 게재
10.4	북한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 국장, [조선중앙통신]이 전문 보도한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 주민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인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합병 결정을 지지
10.5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맞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반대
10.7	김정은, 푸틴 70살 생일 축전, “오늘 러시아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도전과 위협을 짓부시고 국가의 존엄과 근본이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탁월한 영도력과 강인한 의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10.12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역 4곳의 주민투표 결과와 영토 병합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지
11.2	코로나19 영향으로 약 2년 8개월 동안 중단됐던 북한과의 철도 화물 운송을 재개
1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고강도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개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는 북한측 주장을 반복.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이나 추가 제재에 관한 공개 논의 없이 종료
11.16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발의된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
11.21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무산. 러시아측 대표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들과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여 북한이 그에 따라 예상대로 행동한 것”이라면 북한 입장 두둔

IV. 2022년 평가와 2023년 전망

1. 2022년 평가

2022년은 북한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해 상당한 성과를 올린 한해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미·중, 미·러 갈등에 따른 신냉전의 격화가 북한의 대중, 대러 접근을 가속화시켰고, 이런 지정학적 환경이 북한이 올해 63차례 미사일을 시험발사해도 국제사회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반도는 기존의 냉전 분위기에 더하여 신냉전이 더 강화되어 군사적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대북 제재압박 정책의 지속 △대규모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2022년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현장에서 한미일 정상 회담이 열렸고, 이에 따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실제 9월 30일 한미일이 동해 공해상에서 사상 최초로 대잠전 훈련을 했고, 10월 6일에는 한미일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고려할 것과 어떤 나라든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나라를 일방 제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각국이 냉정·자제하고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유지하면서 조속히 의미있는 대화를 재개해 각국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를 일관되게 촉구했다. 러시아도 동북아 지역 동맹들과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여 북한이 그에 따라 맞대응한 것이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미국 때문이라는 북한측 입장을 그대로 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중러 협력을 강화시킨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촉발한 미국은 이를 핑계 삼아 전쟁동맹인 나토의 결속과 확장 즉 유럽의 군사화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나토화를 추진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억제한 국제적 포위환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조선신보』, 2022/08/23). 이런 인식은 북한으로 하여금 지금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을 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가 서로 고립된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결속을 다지는 것이 불가피한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동진정책에 맞서 연대해 줄 북한의 힘이 필요했고, 북한으로서도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4월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가지며 밀착도를 높여온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북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미국이 자국에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고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러시아에 대해서는 똑같은 정책과 기준을 적용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북한, 중국, 러시아는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하게 미국에 의해 피포위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인식은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를 통해서도 방증된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북한·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북중러 관계는 지역 안정과 국제평화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Global Times, 2021/07/12). 더구나 중국은 한미일 동맹관계보다 북중러 관계가 더 우월한 관계라고 강조한다. 한미일 관계는 미국 주도의 일방적 관계이지만, 북중러 관계는 평등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일부 국가는 완전한 주권과 자치권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폄하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관계와 달리 북중러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있는 독립국가들의 관계라며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특히 중국의 타이완 군사적 침공 가능성은 북중러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핵심 이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두 나라와의 밀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러시아 외교력을 활용해 안보리 제재를 극복할 수도 있는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올해에만 10차례에 걸쳐 북한의 도발 문제를 논의했지만, 모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혔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가핵무력 완성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자주노선에 기초한 평화외교를 전개한 결과 국제정치적 조류가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2018년 이후 북한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 대해 대북제재의 완화를 제기하면서 외교적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또한 신냉전의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과 우호친선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세기를 이어 부정의와 온갖 도전을 맞받아 뚫고 헤쳐 온 조선이 다른 나라를 믿고 자체의 강력한 군사적 힘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나가는 오늘의 조류를 주도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신보』, 2022/10/20).

북한은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통해 체제 내구력을 유지하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북한 선박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올 초부터 재개되면서 북한 내 물품 부족현상이 일부 해소되고, 특히 의약품, 건설자재, 식자재와 식량 등이 북한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북

한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하면서 버티기 동력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2022년은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정치, 경제적, 군사적 생존력을 높힐 수 있었던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 2023 북중러 협력관계 전망

2023년 북중러 협력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미중 간의 패권경쟁과 대만을 둘러싼 긴장관계 지속 여부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의 틀에서 북한 및 북핵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개별국가 차원의 대북제재가 아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결의는 준수하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려하면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교류협력의 폭이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미러 갈등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대중, 대러시아 결속 관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북 제재 효과가 갈수록 반감되고, 북한의 핵 능력은 질량적으로 더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2022년 10월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이자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한 바 있고(The White House, 2022: 23). 미 국방부는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10월 27일 일괄 공개하면서 중국을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세력이자 장기적 경쟁자로 지목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당면 위협이자 또 다른 중대 위협으로 상정했고, 북한을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미국 본토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

을 위협하는 상존하는 위협으로 명시했다. 이에 맞대응해 시진핑 주석은 제 20차 당대회(10.16-22)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내세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맞서고,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대만 문제, 홍콩 및 소수민족 중국화 등의 '핵심이익'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중국식 현대화' 모델을 앞세워 개발도상국들을 우군으로 삼으면서 미국 등 서방과의 본격적인 이념과 체제경쟁을 예고한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의 미·중 갈등은 극적인 타협점이 모색되지 않는 한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구 공산권과 서구의 자유주의 진영 간 대결 국면이 더욱 선명해지고,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도 더욱 고착화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런 구도 아래에서 펼쳐질 한미일의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고강도 맞대응 가능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관련 정보공유,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 등 군사협력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어느 시기보다 북한과 한미일 간의 긴장과 대결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북중러와 한미일 사이의 진영 대결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선명해질수록 북핵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실제 중국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적도 있지만 2022년에 지켜본 바와 같이 2023년에는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미, 대남 관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사회주의를 핵으로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국면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해 대내외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 북중, 북러 간 협력

분야가 외교, 경제 분야를 넘어 안보 영역까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이 계속해서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을 진행하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심각한 안보문제로 인식될 경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과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피로 맺은 우정, 연대를 강조해왔지만 동시에 불신을 완전히 접었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추가적이고 연속적인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에 맞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 동원이 보다 빈번해지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둔 미군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펼쳐질 경우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북한 입장을 지지할 지가 핵심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동참 등이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다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년차를 맞이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생경제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 이에 따라 북중 간 무역이 빠르게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고 있고 갈수록 더 높은 수준에서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북한은 중국과의 상당한 수준의 전략적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대중, 대러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구력을 유지 또는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북중러 협력관계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V. 정책 제언

2023년에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지속과 이에 강대강 맞대응하는 한미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연

합군사협력의 강화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예견되는 한반도 위기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지혜로운 대응을 위한 한미, 한미일, 한중, 한일 등 양자, 다자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깊어지고 공고화되고 있는 북중러 협력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중 간에는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는 중국의 이익과도 합치되기 때문이다. 중국도 외교적, 경제적, 기술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위기를 막고 협력을 유지할 대중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는 상황이지만 북한 최대 우방국인 중국을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노력은 배가 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한중 양자관계의 중심에 두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미중관계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연쇄적인 도발이 미국 주도의 위협적인 군사훈련 때문이라는 인식을 고수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북한측의 인식,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향후 변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미중 공조를 통한 핵문제 해결도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에 편승해 운신 폭을 넓혀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 역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간 협력구조를 만들어 문제 해결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참고문헌

- “中 “유엔 새 대북제재 결의 찬성…北, 핵·미사일 개발 안 돼,” 『KBS NEWS』, 2022/09/12.
- “北,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에 노동자 송출 준비 중,” 『데일리엔케이』, 2022/10/09.
- “전쟁위기 몰아오는 미일남(미일한) 3각 군사동맹,” 『조선신보』, 2022/08/23.
- “조선(북한)의 국력강화와 국제정치구도의 변화,” 『조선신보』, 2022/10/20.
- “북한, 러시아내 무역 사무소 설립 준비 중…북·러 ‘밀착’ 확대,” 『데일리엔케이』, 2022/10/2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 부국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2/11/07.
- “시진핑, 미중 회담서 “北 합리적 우려”… 도발 재개에 ‘그린라이트’” 『뉴스1』, 2022/11/18.
- “론평, 드러난 포탄지원설, 후안무치한 강변,” 『통일의 메아리방송』, 2022/11/18.
-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가 답전을 보내어왔다,” 『로동신문』, 2022/11/22.

Global Times, July, 12, 2022.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2022.